



**[쪽방촌 전문목]**  
당사자는 모르는  
쪽방촌 공공임대 개발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02



Economy

코스피	3099.69 (+104.71)	코스닥	936.21 (+29.90)
금리 (미국 3년)	0.995 (-0.011)	환율 (원/달러)	1107.80 (-4.40) (25일)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진동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 “물 들어올때 노 젓자” 포장재·의무휴업 등 巨與의 반기업 입법

## 이슈 짚어보기

### 규제폭주

현장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거대 여당의 규제 입법에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 입법을 발의하기 전에 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기업에게 당근 물려줘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지난해 11월 1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윤미향 자원재활용법 발의 비용상승 등에 기업들 반발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타격 커

자발적 참여엔 인센티브 등 기업 위한 인프라 갖춰야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를 하고 해당 결과의 제품 결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해당 검사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윤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기업들은 반발한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을 상승시키고 제품출시가 늦어져 제품 경쟁력 측면을 크

게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사전 검사 중 제품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경쟁력의 하락을 예상했다. 이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식품, 화장품, 의류, 의약품 등 국내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과대포장을 억제하려는 법령의 취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사전 검사 기관 및 인력 부족, 광범위한 사전 검사 대상의 범위 등은 논의 대상으로 지적했다.

현재 법령상 사전 검사가 가능한 곳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두곳 뿐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직도 상 제품 포장재질 및 포장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자원순환처 환경포장관리부 2명이다.

박수일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들은 타당하다. 독일처럼 신고제로 포괄하여 규제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이러한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보니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류의 유통기간 설정과 같이 자체 혹은 제3자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게 추가 교육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포장지 사용을 많이 줄인 경우 인센티브 제공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 학과 교수는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기업들은 법에 맞춰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3R(제품설계 단계에서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대기업 앞다퉀 투자-동맹, 수소경제 ‘활짝’

현대차-포스코, 수소사업 맞손  
두산그룹도 수소 체질전환 성공

국내 산업계가 수소 경제를 선점하며 또다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으로 상생 구조도 완성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포스코와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이 수소차 등 수소 에너지 활용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는 상황, 포스코가 수소 생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합치겠다는 목표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알려진 원소다. 산소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도 물만 배출해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가동하는 원리로 움직인다. 폭발 반응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수소전기차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핵심 부품은 스택이다.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산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공기도 정화할 수 있어서 높은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현대모비스는 전세계에서 손에 꼽는 스택 개발사다. 세계 최초 상용 수소차인 투싼 퓨얼셀에 이어 세계 최초 2세대 수소차인 넥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아우디가 2018년 현대차그룹과 ‘수소 동맹’을 체결한 것도 스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코오롱스택은 단순히 차량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시대에 수소차가 집과 결합, 발전소 대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하는 대신, 수소 에너지가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바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발전시스템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유럽에 발전시스템 제작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으며, LS일렉트릭과 손을 잡

고 올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반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물이나 산업지역, 오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그룹도 두산퓨얼셀이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고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이 수소 드론을 개발하는 등 수소 산업으로 체질 전환에 성공했다.

문제는 수소다. 수소가 우주에서는 가장 흔한 물질이지만, 지구에서는 순수한 상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야 한다. 때문에 화석연료와 비교해 경제성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수소 생산에 나서며 수소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포스코에 앞서 한화에너지가 지난해 7월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를 준공했으며, 효성도 울산에 액화수소 공장을 짓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수소 가격 하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백신 점검하는 의료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홍남기 “‘친환경차 규제’ 과감히 혁파”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연내 ‘편의증진 10대 과제’ 개혁

정부가 친환경차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없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28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신약개발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5건 이상



을 목표로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법무부 차관, 우정원 제백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빅3 산업이 한국 관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